

야당 인재영입에...민주 재보선 전략공천 카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설 후보를 뽑는데 경선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자유한국당이 재보선을 염두에 둔 인재영입에 발 빠르게 나서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재보선 공천 방법으로 경선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이 내세울 후보와 전략에 따른 '맞춤형 대응'으로 상황에 따라 전략공천 카드도 꺼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11일 "재보선 후보를 내세우는 데 있어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전략공천도 같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공천 카드는 한국당이 이번 재보선을 위해 김원영 전 KBS 사장과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를 영입한 만큼 여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사장은 충남 천안 출신이라는 점에서 충남 천안갑 재선거에, 배 전 아나운서는 서울 송파구를 재선거에 각각 전략공천을 하려고 한국당이 영입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판세로 볼 때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불리하다고 보고 서둘러 인사 영입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도 해당 지역에 전략공천을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까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만 해도 7곳이며, 여기에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재보선 지역이 10곳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미니 총선거'이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원내 1당 사수를 위해 재보선 승리가 민주당 입장에서 절실하다.

문제는 전략공천에 따른 예비후보들의 반발 등 잡음을 클 수 있다는 점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에서 전략공천 움직임이 있다고 우리도 선부르게 전략공천 등을 대응 전략

일단 "경선이 기본 원칙" 유지

공직자 하위 20%는 10% 감산

탈당자 20% 감점...경선안 마련

을 내놓으면 분란만 생길 수 있다"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송파를 재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는 송기호 지역위원장과 최재성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기도를 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송계 인사들을 영입해 재보선에 투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같은 방송계 출신 인사를 영입해서 맞불을 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영입무안신인의 경우도 여러 일각에선 김홍걸 민화현 대표상임의장을 전략공천해보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역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아 뜻을 접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박혜자 예비후보와 송갑석 예비후보의 경선이 예상된다. 이들은 선거사무소 개소와 출판기념회 등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박혜자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선거사무실 문을 열고 선거준비에 나섰고, 송갑석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자서전 '1987 기억하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선 불복 및 탈당자에 대해 경선 시 20% 감산 등 제재를 강화하고 최고위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당원 권리 강화를 위해 당원자치회를 도입하는 한편 합당과 해산 시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또 선출직 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지난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추서식에서 경찰대학 및 간부후보 교육생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안 치안감은 전남도 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5·18 당시 시위대에 발포하라는 전두환 신군부 명령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20%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선에서 10% 감산하도록 했으며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략선거구(전국 29개, 제주도·세종시 제외)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백년당원제 도입, 상설 국민선거인단모집제 도입(선거인단 반영비율 25%→15%), 청소년 예비당원제 도입, 미래부총장 운영 방안 등도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경무감 뒤늦게나마 치안감 추서 이뤄져 기뻐"

문대통령 SNS 축하글

현충원 묘역서 추서식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해 혹독한 고문을 받은 뒤,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故) 안병하 경무관의 치안감 추서 사실을 SNS로 전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고 안병하 경무관의 치안감 추서식이 국립현충원에서 열렸다"며 "안 치안감은 5·18 민주항쟁 당시 전남 경찰국장으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시민의 목숨을 지키고 경찰의 명예를 지켰지만 이를 이유로 전두환 계엄사령부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고 1988년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뒤 오랫동안 명예회복을 못했던 안 치안감은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순직 판정을 받았고 2006년 국가유공자, 2017년 경찰청 최초의 경찰영웅 칭호를 받았다"며 "위민정신의 표상으로 고인의 명예를 되살렸을 뿐 아니라 고인의 정신을 우리 경찰의 모범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을 적으로 돌린 잔혹한 시절이었지만 안 치안감으로 인해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치안감 추서제가 이뤄져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안 치안감에 대한 치안감 추서식은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 현충원 묘역에서 유족과 경찰 유가족회 회원, 시민단체, 현직 경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민단체 'SNS시민동맹'과 안 치안감 유족 등은 이날 경찰유가족회 회원, 현직 경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안 치안감 추서식을 개최했다.

안 치안감은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5·18 당시 시위대에 발포하라는 전두환 신군부 명령을 거부했다. 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회수하고, 시위대에 부상자 치료와 음식 등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는 이 일로 그해 5월 직위해제된 뒤 국군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 사망했다.

안 치안감은 2003년 광주민주유공자, 2006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고, 2015년에는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8월의 호국인물'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시민 보호에 힘쓴 안 치안감의 뜻을 기려 지난해 그를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하고, 고인이 생전 근무한 전남경찰청에 추모 흉상을 세우는 한편 그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이날 추서식은 치안감 특진 이후 현충원 추이 이를 반영해 묘비를 새로 제작함에 따라 시민단체 주도로 이뤄졌다. /임동욱기자 tuim@

강기정 "당원에 문자 발송은 지역위원장 정상적 당무활동"

"이용섭측 문자메시지와는 달라"

"유출된 명부 활용 후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사건과 관련,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이와 연루된 광주시장 출마자는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광주시장 예비후보인 강기정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은 지난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명부 불법 유출과 유출된 명부를 활용한 후보가 있다면 책임지고 예비후보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리당원 4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신이 고소한 건에 대해 강 전 자문위원장은 "문자 발송은 지난해 12월말 대부분 복구에 거주하

는 2만6000여 당원에게 발송됐고, 비용 71만원은 배우자가 의뢰업체에 계좌이체한 것"이라며 "복구갑 지역위원장이자 시당 사무부 당직자로서 의례적이고 정상적인 당무활동이었음에도 이를 불법 유출로 몰고간 것은 전형적인 몰타기요, 구태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고발인 4명을 무고죄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도 일부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71만원을 들여 3만건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중 2만6000건이 발송에 성공했다"며 "접촉 가능한 명단을 이용했을 뿐 불법으로 가져온 것은 하나도 없고, 유출된 광주시당 당원명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신자 대다수가 광주 복구 당원으로, 복구갑 지역위원장에서 의례적인 연발인사였다"며

"권리당원 약정자 1만3000여명, 일반 당원 8000여명이며 나머지 5000~8000여명은 지난해 당원 모집 캠페인 때 모집한 번호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찰이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 안수수색과 함께 현재 수사중인 이용섭 전 일자리부위원장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지역위원장 등 당직자도 아니면서 특정 지역위원회 당원 명부만이 아닌 광주지역 전체 당원명부를 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상적인 당무활동도 아닌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후보 측은 온라인으로 가입한 권리당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사례까지 있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유출된 당원명부를 활용한 후보는 예비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5 맛

황토와 게르마늄 갯벌로 유명한 무안군

추억받은 땅... 무안의 5 맛을 찾아 맛으로 여행을 즐겨요~

무안군

MUANI Family